

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

2024. 5. 14



대한민국정부

목 차

I . 배경	1
II . 추진 경과	1
III . 추진 계획	3
IV . 향후 일정	6

I. 배 경

-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,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쏠영역에서 구조변화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심화시대를 마주
-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, '새로운 디지털 질서'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며 논의를 견인
 - ※ 뉴욕구상('22.9) → B20 서밋('22.11) → 다보스 포럼('23.1) → 파리 이니셔티브('23.6)
- 정부는 글로벌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자,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「디지털 권리장전*」 수립
 - * 『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』 (국무회의 보고, '23.9월)
- 이제 디지털 심화를 온전히 수용하고, 디지털 권리 보장과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

👉 「디지털 권리장전」을 정책으로 구현하고, 속도감 있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계획 마련

II. 추진 경과

- 정부는 디지털 심화의 양태와 그간의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'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*'과 대국민 인식조사**를 실시 **붙임 1**
 - * 과기정통부를 비롯 기재·교육 등 26개 부·처·청 합동('23.10.30~12.29)
 - **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2,000명 대상 설문조사 방식('23.11.16~12.13)
- AI 안전성 보장,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총 52개 발굴 **붙임 2**

【참고 : 디지털 심화 쟁점과 예상 문제】

- ▲ 디지털 격차 확대 ▲ 프라이버시 침해 ▲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→ **보편적 가치 훼손**
- ▲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미비 ▲ 디지털 시장 공정성 우려 → **혁신의 동력 저하**
- ▲ AI 활용 가짜뉴스 확산 ▲ 디지털 재난·사이버 범죄 고도화 → **안전·신뢰 위협**

□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「디지털 권리장전」의 철학과 5대 원칙*을 토대로 부처 간 연계·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대 정책과제로 구체화

* 자유, 공정, 안전, 혁신, 연대

○ 각 정책과제와 관련한 대응 현황과 국내외 동향을 분석·진단하고, 이를 통해 법제도 개선 사항, 연구개발(R&D) 및 시범사업 등 향후 추진과제 발굴

○ 특히,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·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는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핵심과제*로 정하여 집중 관리 추진

*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, 전문가 자문 및 새로운 디지털 질서 관계부처 협의(1.30, 4.3)

【 20대 정책과제 및 8대 핵심과제 】

5대 원칙		20대 정책과제
디지털 권리장전	자유	▲ 디지털 접근성 제고·대체수단 확보 핵심 ▲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핵심 ▲ 잊힐 권리 보장 핵심 ▲ 디지털 심화시대에 적합한 노동의 권리 보장 ▲ 디지털 심화시대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구축 ▲ 디지털 심화시대에 적합한 사회시스템 설계
	공정	▲ AI 개발·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핵심 ▲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확보 ▲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정립 ▲ 메타버스 경제 규범 정립
	안전	▲ AI 기술의 안전성, 신뢰·윤리 확보 핵심 ▲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핵심 ▲ 디지털 재난, 사이버 위협·범죄 대응 핵심 ▲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
	혁신	▲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핵심 ▲ 데이터 개방 촉진 ▲ 분야별 AI 활용 기준 및 원칙 정립 ▲ 디지털 혁신 촉진 및 갈등 관리
	연대	▲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▲ AI·디지털 글로벌 협력 강화

Ⅲ. 추진 계획

① 8대 핵심과제

핵심과제 ①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·윤리 확보

⇒ 선도적인 AI 규범 체계를 정립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

- ☐ AI 혁신과 안전·신뢰(이용자 보호 등)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('24)
- ☐ AI 서울 정상회의(5.21-22) 개최를 통한 글로벌 AI 규범·거버넌스 논의 주도
- ☐ AI 안전성을 검증·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*하고 아태 AI 안전허브化
 - * ICT 유관기관 內 안전 전담조직 설치(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기반 마련)
 - ※ 주요국은 AI 안전성 확보 추진의 핵심조직으로서 'AI 안전연구소' 설립(英 '23.11, 美 '24.2)

핵심과제 ②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

⇒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생성-유통-확산 쉼주기 대응체계 구축

- ☐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제·개정('24)
- ☐ 딥페이크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민·관 협업 대응* 강화('24)
 - * 포털·SNS 사업자 등과 함께 딥페이크 선거운동 전담 모니터링, 감별·삭제 등 신속 대응 中 AI 생성물 표시제 조기도입, 서비스 內 자체 모니터링 등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 강화
- ☐ 딥페이크 탐지·식별('24) 및 삭제요청 자동화('25) 기술 개발 추진

핵심과제 ③ AI 개발·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

⇒ 조속한 AI 저작권 제도 정비를 통한 AI 기반 창작산업 활성화 지원

- ☐ AI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AI 저작권 워킹그룹* 운영(~'24.12)
 - * 학계, 법조계, 산업기술계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, 학습 산출분과로 구분해 쟁점별 심화 토론
- ☐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(代價) 산정방안 연구(~'24.12초)
- ☐ 「저작권법」 등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 마련('24.12)

핵심과제 ④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·범죄 대응

⇒ 고도화·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 확충

- ☐ 상시·종합적 디지털 재난·장애 대응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* 제정('24~)
*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, 규제 적용대상 일원화, 디지털 안전 전담기관의 지정 등
- ☐ 피싱, 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 정비*('24)
* △ 피싱 예방·피해 지원을 위한 「사기방지법」 제정 △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「성폭력방지법」 개정
- ☐ 사이버보안 4대 기술* 개발 투자 확대('24년 1,141억, 전년대비 22.5% ↑)
* △ 데이터·AI 보안 △ 네트워크 보안 △ 디지털 취약점 대응 △ 신산업 융합보안

핵심과제 ⑤ 디지털 접근성 제고·대체 수단 확보

⇒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

- ☐ 모든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「디지털 포용법」 제정('24),
교육 분야의 「디지털 권리장전」인 '디지털 교육규범' 수립('24.6)
※ 향후, 디지털 접근성 영향 평가 및 디지털 포용 지도(지역별 접근성 분석) 도입 추진
- ☐ 계층별·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* 제공 강화('24~)
* △(고령층) 디지털 접근성 보장 위한 「노인복지법」 개정, AI 활용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
△(청년층)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△(지역) 스마트경로당 등 스마트빌리지 확대
- ☐ 취약계층 대상 필수영역(행정, 생활, 금융)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* 확대
* (행정) 찾아가는 보조금 24, (생활) 디지털 안내사, (금융) 우체국 창구 활용 은행업무 제공

핵심과제 ⑥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

⇒ 비대면 진료의 본격 제도화 및 의료산업 혁신 지원

- ☐ 「의료법」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화('24)
※ 이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(의약계, 환자, 소비자 등)을 통한 의견 수렴·소통 강화
- ☐ 혁신기술·서비스(규제특례)*의 비대면 진료 연계 강화('24.3~)
* 건강검진 결과, 투약정보 등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등
- ☐ 개인 건강정보 보호, 처방전 위·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(~'25)

핵심과제 ⑦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

⇒ 디지털 심화 시대, **일할 권리와 쉼 권리**를 균형있게 보장하는 문화 조성

- ☐ 노·사·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본격 공론화('24)
- ☐ 민간의 자율적인 '디지털 디톡스 캠페인*' 추진·단계적 확산('24)
* 원격·유연근무, 초과근무가 많은 SW·디지털 업계 중심으로 우선 유도
- ☐ 스마트쉼 센터 연계 디지털 과의존 예방, 업무 휴식권 교육·상담 실시('24)

핵심과제 ⑧ 잊힐 권리 보장

⇒ 디지털 공간에서 잊고 싶은 개인의 '**과거·기억**'을 지울 수 있도록 지원

- ☐ 아동·청소년의 잊힐 권리 제도화 추진 및 지원사업 대상·규모 확대*('24)
*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지원사업('지우개 서비스')의 법적근거 마련 및 서비스 확대(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→ 제3자가 작성한 본인 개인정보 게시물까지 삭제 검토)
- ☐ 잊힐 권리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예외 사례조사 및 심층분석 실시('25)

2 12대 정책과제

① 디지털 심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

“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유연근무 활성화”

- ☐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 개발('24.12.)
- ☐ 유연근무 도입 중소·중견기업에 인프라 비용
최대 80% 지원,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

③ 디지털 심화에 대응한 사회시스템 설계

“디지털 근로자 보호와 디지털 역량 강화”

- ☐ 특수형태 근로자(플랫폼 종사자 등) 국민연금 가입 등 사회적 보장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('24)
- ☐ 'K-디지털 트레이닝' 확대* 등 신기술 특화훈련
* ('23년) 3.6만명 → ('24년) 4.4만명

② 디지털 심화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구축

“디지털·AI로 학생 중심 교육 실현”

- ☐ 학생 맞춤형 교육 위한 'AI 디지털교과서' 도입
※ ('25) 수학·영어·정보·국어(특수교육) 교과 → ('28) 전 과목
- ☐ 디지털 교육 선도학교 1,000개, AI 중심학교 500개

④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확보

“플랫폼·OTT 등 新시장에 공정한 환경 조성”

- 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('24)
- ☐ 방송-OTT 간 규제 형평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「방송법」, 「IPTV법」 개정안 마련('24)

⑤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정립

“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 명확화”

-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^(24.5), 가치평가 안내서^(~24)
- 디지털 유산* 관련 법제도 규율(안) 마련^(24~)
* 디지털 유산 정의, 성격, 관리자 범위, 유족권리 등 연구

⑦ 데이터 개방 촉진

“데이터 개방·활용을 확대해 新가치 창출”

- 국가중점데이터 20개 분야*로 확대해 공개⁽²⁴⁾
* 헌법재판소 판례정보, 한강홍수통제소의 침수대응정보 등
-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(각 기관 시스템 연계) 구축^(~26)

⑨ 디지털 혁신 촉진 및 갈등 관리

“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혁신 수용”

- 리걸테크 활용방안, 법률 플랫폼 운영기준 마련⁽²⁴⁾
- 「디플저 특별법」 제정^(24~), 구비서류 제로화* 확대
* '24년 400개 → '26년 1,500개 분야의 민원, 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제로화

⑪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

“디지털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 확보”

- 디지털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 개발⁽²⁵⁾
-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및 AI 홍수예보 개시^(24.5)

⑥ 메타버스 경제 규범 정립

“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”

- 메타버스-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수립⁽²⁴⁾
- 가상공간 내 범죄 처벌 규정, 형사절차 특례 검토⁽²⁴⁾
* 아바타 대상 명예훼손·성희롱, 딥페이크 등 인격권 침해 증가

⑧ 분야별 AI 활용 기준 및 원칙 정립

“소분야 AI 본격 활용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”

-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안내 배포^(24.6)
- 완전자율주행 대비 안전 법률 제정안 마련⁽²⁴⁾
- AI 활용 채용 지침 마련^(~25)

⑨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

“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”

- AI 학습에 있어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^(24.上) 및 투명성 확보^(24.下) 가이드라인 마련
-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 확대^(105종 → 120종, '24)
* 공공, 금융에서 나아가 가족결합할인 등 통신분야까지 확대

⑫ A·디지털 글로벌 협력 강화

“디지털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”

- 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
※ 대외경제협력기금 디지털 분야 확대(24. \$10억 → '26. \$12억)
※ 디지털협력센터 추가 개소(24. 8개 → '25. 목표 11개)

IV. 향후 일정

☞ **소부처가 합심하여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,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, OECD·UN 등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선도**

- ① **[공론화]**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참여 유도(5~12월)
※ AI 안전·신뢰(5월) → 디지털 접근성(7월) → 딥페이크 가짜뉴스(9월) → 비대면 진료(11월)
- ② **[정책연구]** 글로벌 규범 논의와 정합성 갖춰 심층 정책연구 추진(~12월)
※ △디지털 인권(英 옥스퍼드大) △북미, 유럽 8대핵심과제 정책 추진현황 분석(加 UBC)
- ③ **[글로벌 규범]** 상설논의체 ‘韓-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’ 신설(5월), ‘UN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’에 「디지털 권리장전」 주요 원칙 반영(9월)
- ④ **[점검진단]** 부처별 추진계획 이행 점검(분기별), 범정부 실태진단 정기 실시(연말)
※ 정부, 기업 국민 등 우리나라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수(Index) 개발 추진

붙임 1

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

□ **[실태진단]** 디지털 심화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현황을 진단하여 52개 쟁점을 도출하고 「디지털 권리장전」의 구조와 연계하여, 3가지 유형으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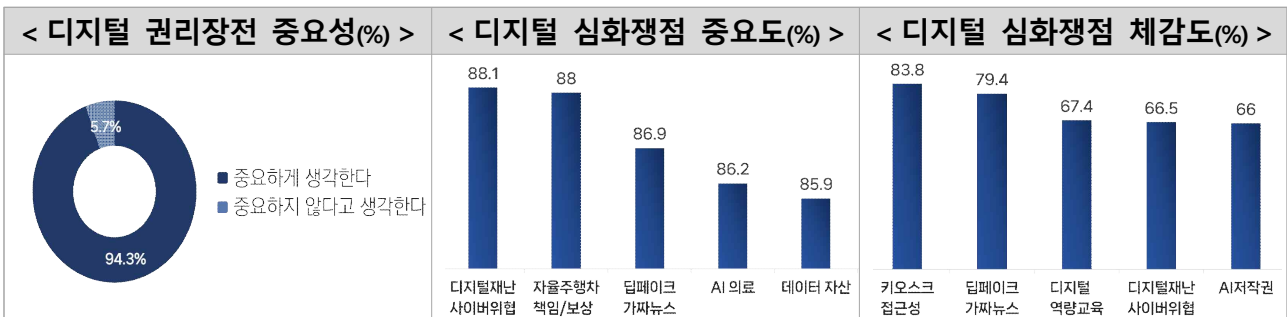
유형 1	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권 보장	▶	디지털 심화 시대에도 존중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쟁점 (12개)
유형 2	디지털 심화 시대의 지속적인 혁신	▶	기존 질서로는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워 규범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쟁점 (24개)
유형 3	디지털 심화 시대의 철저한 대비	▶	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우려 또는 부작용과 관련한 쟁점 (16개)



□ **[인식조사]** 디지털 심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급한 대응을 요구(체감도) 하거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(중요도) 쟁점 등을 조사·분석

※ 참고 :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

- ▲ 조사대상 :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약 2,200 명(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층화추출)
- ▲ 조사기간 : '23.11.16 ~ 12.13(약 4주 간)
- ▲ 조사방식 :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
- ▲ 조사내용 : 디지털 심화에 따른 우려사항(쟁점) 및 우선 해결 필요사항, 체감도
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등



디지털 심화시대 기본권 보장 (12개)

핵심 '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'

-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

핵심 '잊힐 권리 보장'

- 디지털 환경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

핵심 '디지털 환경에서 접근성 보장'

-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
- 행정영역 디지털 대체수단 확보
-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
- 취약계층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

'디지털 심화에 적합한 노동권리 보장'

- 플랫폼 종사자 업무여건 개선
- 재택근무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 대응

'디지털 심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구축'

- 유·초·중등 AI·디지털 교육 확대
-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

'디지털 심화에 적합한 사회시스템 설계'

-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
-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체계 개편

디지털 심화시대의 지속적인 혁신 (24개)

핵심 'AI 개발·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'

- 생성형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및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

'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확보'

- 온라인 플랫폼 · AI시장 공정성 확보
-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
-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
- 통신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
- 디지털세 과세 방안

'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정립'

- 데이터 자산의 보호 관련 제도 정비
-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상속여부

'메타버스 경제 규범 정립'

-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규범 정립
-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
- 가상공간에서의 인권권 보호

핵심 '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'

-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

'데이터 개방 촉진'

- 양질의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
- 민간 데이터 공유·개방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

'분야별 AI 활용 기준·원칙 정립'

- 생성형 AI 교수·학습 활용 기준 정립
- 금융 분야 AI 활용 기준 정립
- AI 채용 관련 기준·원칙 정립
- 군사분야 책임있는 AI의 활용 방안
-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안전 등 관련 법제도 정비
-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·제도 정비
- 디지털AI 의료기기 활용 및 안전성·신뢰성 확보 방안

'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'

- 민간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
-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
-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사회 갈등 조정

디지털 심화시대의 철저한 대비 (16개)

핵심 'AI 안전·신뢰성 확보'

- AI 편향 대응
- AI 안전·신뢰 확보를 위한 규범 정립
- AI 제조물 책임 관련 제도 정비

핵심 '디지털 재난, 사이버 위협·범죄대응'

- 디지털 재난 예방, 대응
- 사이버 위협 예방, 대응
- 공공부문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확보
-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별·혐오 표현 대응
- 디지털 범죄 대응·피해자 보호
- 디지털 범죄·유해정보로부터 아동·청소년 보호

핵심 '딥페이크 활용한 가짜뉴스'

-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

'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'

-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
-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AI·데이터 활용

'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'

- 디지털 분야 저탄소 전환 촉진
-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

'글로벌 AI·디지털 협력 강화'

- 글로벌 AI·디지털 규범 형성
-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